

## 도시 저소득 계층의 저축실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자산형성지원정책의 도입과 관련하여 -

주은수\* · 엄태영\*\*

An Explanatory Study on the Conditions of Saving Activity and the Determinants of Savings among Low Income Urban Families in Korea

- A Discussion for the Initiation of Asset Building Policies -

Eunsu Ju\* · Tae-Young Um\*\*

**요약 :** 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 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실태 및 관련요인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저축 실태 및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자산형성지원정책의 도입 및 확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토빗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저축결정요인으로서는 가구 특성과 가구주 특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소득 가구의 30~40%가 월평균 15~20만원의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토빗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두에서 가구의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 생활비 지출, 가구원 수가 저소득 가구의 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한계저축성향은 저소득 가구가 비저소득 가구에 비해 더 높았다.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해볼 때, 자산형성지원정책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계층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는 역진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역진성의 문제는 매칭비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한계저축성향이 고소득 집단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저축동기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저소득 가구, 자산형성지원정책, 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 빈곤

**ABSTRACT :**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s in asset building policies for low income families with the initiation of Child Development Accounts. However, research is limited on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low income families' saving activity and the determinants of their savings.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of saving activity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avings amount among Korean low income families by using the 7th wave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then discusses w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nitiation or expansion of asset building policies. Descriptive, tobi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re applied for the study. According to the findings, about 30-40% of the low income families saved on average 150-200 thousand won per month. Both tobit and logistic analyses identify the followings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effect

\*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연구원(Ph.D.Candidate/Research Specialist,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ies), 교신저자(E-mail: juxx0008@umn.edu, Tel:1-612-615-1220).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Researcher,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the savings amount of Korean low income families: earned income, non-earned income, total family expenditure except savings, and the number of the family members. In addition, Marginal Propensity to Save (MPS) is higher in low income families than in higher income families.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set building policies may result in regressive programs which provide more benefits to less needy families. This problem might be mitigated by applying varying matching rates. Bearing in mind the higher MPS in low income families, however, further discussion is necessary regarding whether a new policy is needed to encourage saving behavior among low income families in Korea.

**Key Words** : low income family, asset building policy, child development accounts(CDS), savings, poverty

## I. 서 론

최근 수십 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던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sup>1)</sup>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와 함께 소득 계층간 저축률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변화를 겪었다(유경원·조은아, 2006). OECD(2008) 자료에 따르면, 1989년에 23.6%이던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98년에 24.9%를 기록한 뒤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에는 2.2%까지 떨어졌다.<sup>2)</sup> 그 이후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5% 미만의 낮은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이 같은 저축률 감소 현상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하위 소득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와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유경원·조은아(2006)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30%가 넘는 가계저축률을 보이고 있지만, 조영무(2004)는 소득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2004년 1/4분기 동안 월 평균 14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오히려 추가적으로 돈을 차입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국, 중·하위 소득계층이 전반적인 저축률 감소 현상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낮아질수록 부채의 증가와 함께 저축률의 감소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계층의 가계저축이 감소하게 될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전반적인 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빈곤층의 경우, 자산의 부재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부족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절대적인 소득의 부족뿐만 아니라 정보의 부족, 자산이 늘어날 경우 공공부조 수급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애요인들로 인해 자산축적의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낮은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에서는 최근 저소득계층의 저축을 장려

1) 일반적으로 가계저축률은 전체 저축률에서 정부와 법인의 저축률을 제외한 저축률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저축률 = (가처분 소득 - 소비지출) / 가처분 소득

2) [http://www.oecd.org/document/61/0,3343,en\\_2825\\_32066506\\_2483901\\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61/0,3343,en_2825_32066506_2483901_1_1_1_1,00.html)

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정책을 실시 중이며, 다른 몇몇 나라에서도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작년 4월부터는 3만 여명의 요보호아동(시설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 CDAs)를 실시하고 있으며(정외택, 2007), 보건복지부(2007)에 따르면 2010년까지 이 제도의 수급대상을 전체 신생아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란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아동 명의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로서, 쉽게 말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나은 여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종자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현재 영국(Child Trust Fund)을 비롯해 싱가포르(Children's Development Account)와 캐나다(Canada Education Saving Program) 등의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sup>3)</sup> 특히 영국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2002년 9월 이후에 출생한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4)</sup>

매칭 펀드의 제공을 통해 저축을 유인하는 아

동발달지원계좌의 기본 아이디어는 Sherraden (1988, 1991)의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와 유사하다. 개인개발계좌란 프로그램 참여자가 저축을 할 경우 미리 정한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칭 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대신, 이렇게 형성된 자산을 주택구입이나 교육, 소규모 창업과 같은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저소득층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Sherraden, 1988, 1991; Sherraden et al., 2003). 현재 미국과 더불어 영국(Saving Gateway)<sup>5)</sup>, 캐나다(LearnSave)<sup>6)</sup> 등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페루, 중국 등이 시범사업을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다(이태진 외, 2005).<sup>7)</sup>

기본적으로 개인개발계좌는 저소득계층의 저축 수준이 낮다는 전제하에, 저축액에 비례하는 매칭 펀드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이 보다 많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sup>8)</sup> 따라서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저축실태가 어떠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저축 여부 및 저축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더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오던 가계저축률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3) <http://gwbweb.wustl.edu/csd/about/gap.htm>

4) <http://www.childtrustfund.gov.uk/>

5) [http://www.hm-treasury.gov.uk/documents/financial\\_services/savings/topics\\_savings\\_gateway.cfm](http://www.hm-treasury.gov.uk/documents/financial_services/savings/topics_savings_gateway.cfm)

6) <http://www.sedi.org/html/programs/learnSave.asp>

7) IDAs를 비롯한 자산형성지원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 국가에 따라, 혹은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액의 100% 혹은 200%의 금액을 매칭 펀드로 지원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비율은 50%~50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최대 지원 금액, 프로그램 참여기간, 형성된 자산의 사용용도 제한 여부 등의 내용도 프로그램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진 외(2005)에 잘 정리되어 있다.

8)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Sherraden(1988, 1991)은 공공부조 제도의 자산기준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저소득계층의 저축행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공공부조의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감소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 계층의 최근 저축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시행을 계기로 자산형성지원정책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그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계층의 저축실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sup>9)</sup>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소득 계층의 저축실태를 검토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그들의 저축액 및 저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인개발계좌 제도의 도입이나 아동발달지원계좌의 확대에 관한 논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II. 선행연구 검토

저축에 관한 가장 전통적인 연구 주제는 저축의 결정요인, 다시 말해, 저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정의되며, 저축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이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통해 저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저축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저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 뒤, 선행연구가 밝히고 있는 저축결정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저축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가 전체 소득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저소득계층의 저축행위

를 이해하는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는 저소득계층의 저축실태 및 저축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1.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이론

한 가계의 저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는 것은 역시 소득이다. 하지만, 소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은 이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비와 저축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는 Keynes(1933)의 절대소득가설과 Dusenberry(1949)의 상대소득가설, Modigliani and Ando(1960)의 생애주기가설,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 등이 있는데, 이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Keynes(1933)는 저축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소득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감소하게 되지만,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발생하는 소비의 증가분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저축성향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Keynes(1933)의 절대소득가설은 동일한 소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저축수준을 보이는 사례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Dusenberry(1949)는 절대소득가설의 이 같은 한계는 개인의

9) 물론 현재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대상은 요보호아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저축 역시 대부분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 집단의 저축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보다 많은 대상에게 확대할 계획이라면 그 잠재적 대상 집단의 저축실태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의 설계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비행위가 타인의 소비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상대소득가설을 제기하였다. 이 가설에 의하면, 개인의 소비수준은 절대소득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자신의 과거 소비수준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결정된다. 즉, 주변 사람들의 소비수준이 높거나, 과거에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면, 자신의 절대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생애주기 가설과 항상소득 가설은 소득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먼저, 생애주기 가설을 제기한 Modigliani and Ando(1960)는 한 개인의 저축수준은 소득과 생애주기의 관련성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사람들은 일생에 걸쳐 동일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기의 소득을 유년기와 노년기로 분산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애주기 가설은 유년기에는 부모에게 의지하거나 부채를 통해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한 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중·장년기를 통해 젊은 시기의 부채를 갚는 것은 물론,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사용할 자금까지 축적한다고 설명한다.

Friedman(1957)은 소득을 예상 가능 여부에 따라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구분한 후, 개인의 소비는 주로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항상소득가설을 제기하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계획을 세우며, 현재의 소득과 예상되는 미래소득의 총량, 즉 항상소득의 일정 비율을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비한다. 그리고 이 소비수준은 항상소득의 증가 혹은 감소가 예상될 경우에 한해 변하며, 일시소득과 같이 소비계획에 고려되지 않았던 소득은 대부분 저축으

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항상소득가설은 전체 소득에서 일시소득의 비중이 커질수록 저축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기존의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저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이다. 이론에 따라 소득의 개념을 절대소득, 상대소득, 생애소득, 혹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 등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는 있지만, 모든 이론이 각기 정의하고 있는 소득에 따라 저축수준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이 저축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절대소득 가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론이 소득의 개념을 절대소득 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소득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저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밝혀진 저축결정요인을 가구 특성 및 가구주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2. 저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1) 가구의 특성

앞서 살펴본 가설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가구의 특성 중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득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가구주의 나이나 학력, 그 외에 저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저축에 대한 소득의 순수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소득은 여전히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순미·양정선, 2004; 이정현, 2004; 차경욱, 2003; 성지미·안주엽 2001; 양세정·이영호, 1996; 양정선 1991; 이계식, 1986; 백설희, 1983; Xiao, 1996; Avery and

Kennickell, 1991; Hefferan, 1982). 이 같은 결과는 Keynes의 절대소득가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축도 많이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가구의 저축은 가구의 인적 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경제활동에 참여중인 가구원의 수와는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성지미·안주엽, 2001; Hefferan, 1982),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수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정선, 1991; 이계식, 1986; 이명훈, 1985). 전체 가구원의 수보다는 자녀의 수와 저축의 관계가 검토되기도 하는데, Hefferan(1982)과 양정선(1991)은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저축액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반면, Espenshade(1984)는 생애주기 가설이 설명하고 있듯이 저축수준은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가구의 자산규모도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Xiao(1996)는 유동자산과 저축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보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저축규모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 같은 경향은 Avery and Kennickell(1991)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인 주택의 소유여부와 저축의 관계에 관해서는 국내와 국외의 연구가 다소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Hefferan(1982)은 미국의 소비자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 분석을 통해 임차가구에 비해 자가 가구의 저축수준이 높다고 밝혔으나, 이명훈(1985)은 주택부담의 영향으로 인해 전세 가구에서 월세가구, 자가 보유 가구의 순서로 한계저축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양정선(1991)과 성지미·안주엽(2001)의 연구도 이명훈(1985)의 연구와 같이 무주택가구의 가계저축률이 자가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구주의 특성

생애주기가설이 설명하고 있듯이 가계저축은 가구주의 나이와 역 U자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정선, 1991; 이명훈, 1985; 백설희, 1983; Hefferan, 1982).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유년기와 노년기의 저축 수준은 매우 낮으며, 저축의 대부분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중·장년기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나이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학력도 저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김순미·양정선, 2004; 이계식, 1986; Hefferan, 1982). 김순미·양정선(2004)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 학력이 증줄 이하인 경우, 월평균 저축액이 고졸에 비해 74,770원, 대학원 이상인 경우 비해 460,037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더불어 가구주의 직업이나 고용상태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보다는 일용근로자인 가구가, 일용근로자인 가구보다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인 가구가 보다 많은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현, 2004; 이계식, 1984).

## 3. 저소득 계층의 저축에 관한 연구 및 한계점

지금까지 저축과 소비에 관한 일반이론 및 가계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렇듯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저축결정요인을 밝혀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전체 소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을 뿐, 저소득층에 특화된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개인개발계좌(IDAs) 관련 연구는 저소득계층의 저축행위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Grinstein-Weiss et al.(2006)

은 저소득계층도 저축을 유인하는 제도를 접하게 되면 저축을 시작하거나, 저축액을 늘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Sherraden et al.(2003)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저축은 소득보다는 매칭비율과 같은 IDAs 프로그램의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IDAs 참여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Ziliak(1999)의 연구는, 빈부 간 자산축적의 격차가 주로 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가계저축률이 크게 감소하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저소득 계층의 저축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계층 간 저축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경고하고, 소득·지출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할 뿐, 저소득 계층의 저축 결정요인에 대한 특화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도입과 함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저소득계층의 저축실태는 어떠하며, 그들의 저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 및 설계에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소득계층의 최근 저축실태를 살펴본 후, 기존의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밝혀진 요인들을 토대로 저소득계층의 저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과 비교하였

을 경우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개발계좌 제도의 도입 혹은 아동발달지원계좌의 확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저축실태 및 관련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7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 매년 동일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해 동일한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횡단연구는 물론 종단연구도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6). 7차년도 자료는 2004년에 조사된 자료이며, 노동패널 조사 항목의 상당부분이 조사 이전 년도의 정보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 투입된 자료는 2003년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sup>10)</sup>

본 연구는 7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총 4,848가구 중, 가구주의 나이가 노동능력자로 인정되는 만 65세 이하인 3,644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저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총 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에 대해 결측값을 갖거나 저축액이 가구의 총소득을 초과하는 348가구는 불성실한 응답을 했거나 특수한 경우에 해당

10) 현재 한국노동패널의 공식적인 가장 최근 자료는 8차년도 자료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처음 시작된 시점에는 8차년도 자료가 공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가장 최근 자료였던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소득수준별 저축실태 및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대상 집단을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sup>11)</sup>,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120% 이하인 경우도 포함), 그리고 1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인 가구를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하여 자활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공식적인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으로 인정하고 있고,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그 지원 대상을 150%까지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산형성지원정책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120% 혹은 150%선이 대상 집단을 선정하는 기준점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석대상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이상인 집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변수의 구성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속변수는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이다. 한국노동패널은 매년 응답자의 답변을 토대로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을 조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①예/적금, ②개인연금, ③보장성보험, ④저축성보험, ⑤계, ⑥기

타의 6가지 방법으로 저축된 금액이 모두 포함된다.<sup>12)</sup> 본 연구는 노동패널이 조사하고 있는 6가지 방법으로 저축된 금액의 합계를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으로 정의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단,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이 변수를 바탕으로 총 저축액이 0인 가구는 무저축 가구, 0이상인 가구는 저축가구로 정의되는 이분변수를 새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와 관련된성을 살펴보기 위한 독립변수에는 선행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요인들로 보고되었던 가구특성에 관한 변수들(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의 수,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대상 여부, 월 평균 생활비, 주거형태)과 가구주 특성(연령, 학력)에 관한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경우, 7차년도 노동패널에서 연간 총소득의 형태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로 투입된 월 평균 저축액과 그 기간을 통일하기 위해 12로 나눈 값을 사용했다. 근로소득은 응답자가 제공한 소득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비근로소득은 노동패널이 조사하고 있는 다양한 소득원들(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수급액, 사회보험 수급액을 제외한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총 합계를 계산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노동패널은 가구의 월 평균 식비, 외식비, 교육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 통신비

11)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가구원의 수와 물가를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발표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3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분석대상가구의 가구소득 및 가구원수를 고려해 각 가구의 최저생계비대비 소득수준을 계산하였다. 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모두 고려되었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절에서 언급할 것이다.

12)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저축액은 일반적인 저축액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 총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총소득-소비지출)로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나 소비지출과 상관없이 앞서 제시한 6가지 항목의 총합을 총 저축액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소비지출과 저축액의 합이 총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을 이와 같이 정의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자산형성지원정책의 도입에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매칭 펀드를 받기 위해 은행저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저축액으로 고려하기 위해 개인연금이나 보장성보험 등에 지출된 금액도 저축액에 포함하였다.



등 다양한 지출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라는 변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를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 저축은 역U자형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연령 및 연령의 제곱을 함께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구의 주거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기타로, 가구주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가변수(dummy variable)의 형태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한편, Sherraden et al.(2003)을 비롯한 몇몇 연구에서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사회제도적 변수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자산형성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조사대상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적 요인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연구가 활용하고 있는 노동패널에 그러한 요인으로 고려될 만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저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토빗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이처럼 두 가지 분석방법을 함께 사용한 것은 종속변수에 저축액이라는 연속변수를 사용한 분석과 저축여부라는 질적 변수를 사용한 분석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토빗 분석은 종속변수가 특정값 이상이나 이하에서 절단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OLS(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의 경우 종속변수인 가구의 월 평균 저축액이 0에서 절단된 정규분포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OLS 회귀분석이 아닌 토빗 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저축액의 변화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저축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고,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도입 및 시행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tata 9.0을 사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인구학적 특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인 가구, 150% 이하인 가구(120% 이하인 가구도 포함), 150% 초과인 가구들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 해당하는 가구수는 601가구, 858가구, 2,806가구였으며, 각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 가구 및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가구주의 성별은 모든 집단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저소득가구<sup>13)</sup>의 경우 고소득가구에 비

13) 분석결과 대체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이하 가구와 150%이하인 가구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저소득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는 두 집단을 모두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임을 밝힌다.

〈표 1〉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주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N=601)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 (N=858)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N=2,806)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성별	여	161	26.79	219	25.52	307	10.94
	남	440	73.21	639	74.48	2,499	89.06
연령	20세 미만	2	0.33	2	0.23	2	0.07
	20~29세	54	8.99	69	8.04	246	8.77
	30~39세	118	19.63	182	21.21	861	30.68
	40~49세	179	29.78	269	31.35	893	31.82
	50~59세	133	22.13	192	22.38	617	21.99
	60~65세	115	19.13	144	16.78	187	6.66
학력	초졸 미만	142	23.63	189	22.05	248	8.84
	중졸	117	19.47	168	19.6	348	12.4
	고졸	234	38.94	350	40.84	1,114	39.7
	대졸	95	15.81	135	15.75	956	34.07
	대학원 이상	13	2.16	15	1.75	140	4.99
국민기초생활 보호사업	비수급자	560	93.18	814	94.87	2,804	99.93
	수급자	41	6.82	44	5.13	2	0.07
가구원 수	1명	100	16.64	124	14.45	254	9.05
	2명	115	19.13	136	15.85	320	11.4
	3명	128	21.3	187	21.79	660	23.52
	4명	173	28.79	290	33.8	1,194	42.55
	5명 이상	85	14.15	121	14.11	378	13.48
자녀 수	없음	349	58.07	467	54.43	1,321	47.08
	1명	91	15.14	136	15.85	595	21.2
	2명	129	21.46	208	24.24	803	28.62
	3명 이상	32	5.32	47	5.47	87	3.10
주거형태	자택	267	44.43	387	45.16	1,683	60
	전세	149	24.79	227	26.49	742	26.45
	월세	124	20.63	163	19.02	246	8.77
	기타	61	10.15	80	9.33	134	4.78

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가구주의 연령 분포는 모든 집단에서 40대를 정점으로 역U자 분포를 보였으며, 고소득가구의 경우 저소득가구에 비해 60대 이상인

가구주의 비율이 10% 정도 낮았으며, 대신 30대인 가구주의 비중이 그만큼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가구는 중졸 이하의 비중이, 고소득가구는 대졸 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의 특성 중 국민기초생활보호사업의 지원

〈표 2〉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실태

구 분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N=601)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 (N=858)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N=2,806)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저축여부	비저축가구	404	67.22	513	59.80	461	16.43
	저축가구	197	32.78	345	40.20	2,345	83.57
저축유형 <sup>1)</sup>	예금·적금	27	13.71	66	19.13	1,377	58.72
	개인연금	17	8.63	36	10.43	453	19.32
	보장성보험	173	87.82	305	88.41	2,088	89.04
	저축성보험	21	10.66	35	10.14	335	14.29
	계	3	1.52	8	2.32	119	5.07
	기타	0	0.00	0	0.00	4	0.17
월평균 저축액 <sup>2)</su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6.14	15.68	20.34	18.98	70.53	76.68

주: 1) 저축유형의 %는 저축가구대비 해당 저축유형의 저축이 있는 가구의 비율임.

2) 저축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임(비저축가구 제외).

을 받는 가구는 저소득 가구에서도 10%를 넘지 않는 낮은 분포를 보였다. 가구원의 수는 모든 집단에서 4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는 대략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 혹은 그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의 대부분은 1명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주거형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자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 45%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고소득 가구는 60%가 자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경우 고소득 가구에 비해 월세를 살고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2.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 실태

우리나라의 저소득 가구 중 실제로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그들이 선호하는 저축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저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저축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패널에서는 가구 저축을 1)예금/적금, 2)개인연금, 3)보장성보험, 4)저축성보험, 5)계, 6)기타의 6가지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다는데, 〈표 2〉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저축가구의 비율과 저축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2〉에 의하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34% 정도가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월평균 16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가구에서 선택한 저축방법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으며, 좁은 의미의 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적금을 활용하는 경우는 전체 601가구 중 27가구로 매우 낮았다. 이 같은 상황은 소득기준을 150%로 올리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축가구의 비율은 40%로, 7%가량 증가했고, 월 평균 저축액은 4만 원 가량 늘어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저축은 보장성 보험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적금을 활용하여 저축을 하고 있는

〈표 3〉 분석결과

		토빗 분석 (Coef.)			로지스틱 분석 (Odd Ratio)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N=590) <sup>4)</sup>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 (N=845)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N=2,801)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N=590)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 (N=845)	최저생계비 대비 150% 초과 (N=2,801)
상수		-129.30	49.88	89.38			
가구주 특성	연령	-10.52	-16.00	4.52	0.943	0.950	1.070
	연령	0.10	0.13	-0.18	1.001	1.000	0.999*
	학력 <sup>1)</sup>						
	(중졸)	33.73	23.61	-4.06	1.465	1.293	0.902
	(고졸)	51.50	32.46	49.80	1.965*	1.522	1.269
	(대졸)	35.19	23.77	147.92*	2.053	1.486	1.760*
	(대학원이상)	-35.42	-67.23	290.06**	2.015	1.347	1.149
가구특성	근로소득	0.33***	0.32***	0.26***	1.002***	1.002***	1.000***
	비근로소득	0.41***	0.36***	0.02	1.003***	1.002***	1.000
	생활비지출	0.11***	0.10***	-0.06**	1.001**	1.001***	0.999
	가구원수	-49.85**	-39.34*	-31.08	0.637**	0.735**	1.074
	자녀수	19.61	11.43	-3.62	1.450*	1.349*	0.979
	공공부조 수급여부 <sup>2)</sup>	-106.97	-52.71	62.40	0.410	0.474	-
	주거형태 <sup>3)</sup>						
	(전세)	-26.22	-29.80	-36.95	0.883	0.913	1.073
	(월세)	-60.02	-91.65*	-349.53***	0.769	0.622*	0.343***
	(기타)	-48.18	-45.28	-179.31*	0.717	0.679	0.459**
/sigma		264.03	304.24	839.39			
Log Likelihood		-1541.34	-2699.23	-19472.64	-308.90	-468.21	-1103.71

주: 1) 초등학교 졸업 미만을 기준집단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2) 0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비수급자, 1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3) 주거형태가 자가인 가구를 기준집단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4) 결측값으로 인해 최종분석에 투입된 사례수가 앞에서 언급된 전체 사례수보다 약간 작다.

\* p<.05, \*\* p<.01, \*\*\* p<.001

가구는 전체 858가구 중 66가구에 불과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소득 가구의 경우 80% 이상의 가구가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축가구의 60%에 가까운 가구들이 예금·적금을 활용하고 있었다. 월 평균 저축액도 70만원으로 저소득 가구들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장성 보험이나 예금·

적금에 비해 개인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의 활용도는 낮았으며, 모든 계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저축유형은 보장성 보험이었다. 이처럼 보장성 보험의 이용도가 높은 것은 많은 가구들이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저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은 가구의 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토빗 분석과 가구의 저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토빗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인 집단과 150% 이하인 집단의 결과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생활비 지출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저축액은 낮아졌다.<sup>14)</sup> 항상소득 가설이 설명하고 있듯이, 저축수준은 근로소득보다는 비근로소득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1만원 증가함에 따른 두 집단의 저축액의 증가폭은 각각 3,300원과 3,200원이었지만, 비근로소득 1만원 증가에 따른 저축액의 증가는 4,100원과 3,600원으로 근로소득의 증가에 대한 변화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저축액의 변동 폭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에서 더 두드러졌다.

가구주의 연령이나 학력, 자녀수, 공공부조 수급여부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인 경우, 120% 이하인 경우와는 달리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의 저축액이 집을 소유한 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 가구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가구주의 학력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

난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유의미하였던 가구원수와 비근로소득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저소득 가구와는 달리 가구의 생활비 지출이 많아질수록 저축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도 토빗 분석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경우 토빗 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자녀의 수가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저축을 하는 경향은 늘어났지만, 그것이 유의미한 저축액의 차이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토빗 분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던 생활비 지출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고소득 가구의 대부분이 저축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변수인 저축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독립변수의 변화로 인한 종속변수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가구의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생활비 지출은 모든 소득집단에 걸쳐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 및 저축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가구원 수가 많아지는 것은 저소득가구의 저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비저소득 가구의 저축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저축액에 대한 학력의 영향은 주로 고소득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인 가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월세를 사는 가구의 저축액이 유의미하게 적었다.

14) 본 연구에서는 저축액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부채를 동원해 소비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이 저축액과 소비지출의 합보다 적을 수도 있다. 변수 구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I. 연구방법을 참조할 것.

##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소득 계층의 저축실태 및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60% 이상의 저소득 가구가 소액의 저축도 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절대 빈곤선을 겨우 넘는 수준의 저소득 가구들 중 30~40%의 가구가 월 평균 15만 원 이상의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낮은 수준의 저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상이한 조건들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IDAs를 통해 저축에 대한 유인책이 제공되고 있는 미국 ADD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참여자들의 경우 가장 많은 저축을 한 사람의 월 평균 저축액이 \$40을 채 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보면(Sherraden et al., 2003),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저축률 및 저축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적 수치만으로 저축을 하지 않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저축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축보다는 현재의 생활을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저축을 가로 막는 제도적인 요인들로 인해 저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률은 선택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궁핍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저소득 가구의 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대부분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요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수준과 생활비 지출 수준이 높은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저축을 많이 하고 있었

으며, 가족의 수가 많아서 생활비의 부담이 높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소득 증가에 따른 저축액의 증가 혹은 저축 가구가 될 가능성의 증가폭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열악한 경제적 여건의 문제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미국 IDA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 Schreiner et al. (2002)의 연구와는 상충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두 연구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소비중심의 미국사회와 전통적으로 저축을 강조해 온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Schreiner et al. (2002) 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저축이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IDAs와 같은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본 연구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혹은 1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150% 초과 가구에 비하여 저축수준은 낮았지만, 소득에 대한 저축액 혹은 저축 여부의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이 비저소득층에 비하여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저축액이 많았고, 저축가구가 될 가능성도 더 많이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자산형성지원정책의 기본 가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저축동기 부족'과 상충된다. Sherraden et al. (2003)은 저소득층이 낮은 저축수준을 보이는 것은 소득 수준

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축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자산형성지원정책과 같은 저축유인책의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의 저축동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추가적인 소득 증가분에 대한 저축 동기는 저소득층이 비저소득층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낮은 저축 수준은 동기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여건의 미비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산형성지원정책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저축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참여가구의 저축액을 바탕으로 경제적 지원정도가 결정되는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은 자칫하면 역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빈곤정책이 보편주의적 원칙을 침해하면서도 빈곤계층에 대한 선별적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산형성지원정책은 저축을 통한 수급자의 기여를 일정 부분 전제하고 그 기여에 비례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이 불가능한 여건에 처한 가구들은 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물론 역진성의 문제는 가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매칭비율의 도입 및 공공부조와의 연계를 통해 어느 정도는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 가구의 저축 수준은 소득과 정(+)의 관계, 가구원 수와 부(-)의 관계를 보이며,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자가인 가구에 비

해 낮은 저축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매칭비율을 조정하면 역진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의 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득 증가에 따라 매칭비율을 조금씩 감소하도록 한다면,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와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매칭비율을 적용해주고, 소득이 너무 낮아서 저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의 급여액을 높여주는 것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제공하게 되는 문제점은 해결 또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진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과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고 효과적인 빈곤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지만, 과연 수급자의 기여를 전제로 한 빈곤정책이 권리로서 주어지는 빈곤정책과 비교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제도를 통해 형성될 자산의 규모가 실질적인 빈곤 탈출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인지, 장기간의 적립기간을 갖는 자산형성지원정책이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와 비하여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산형성지원 제도의 도입이 결과적으로 기존의 공공부조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인지와 같은 많은 질문들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해답이 제시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산형성지원정책이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순미 · 양정선, 2004, “도시근로자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  
험, 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42(9): 37~51.
- 백설희, 1983,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7,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추진계획」.
- 성지미 · 안주엽, 2001, “한국가계의 저축률 결정요인: 사  
회경제환경과 저축동기의 효과”, 경제학공동학술대  
회/한국금융학회 발표문.
- 양세정 · 이영호, 1996,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대한  
가정학회지』, 34(2): 201~215.
- 양정선, 1991, “체제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  
행동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현,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저소득층  
저축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경원, 조은아, 2006,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 확대  
의 원인분석” 금융경제연구 266.
- 이계식, 1986, “도시가계의 저축행태 분석”, 『한국개발연  
구』, 8(4): 16~40.
- 이명훈, 1985,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저축행태분석”, 『조  
사통계월보』, 한국은행 8월호: 31~50.
- 이정현, 2004, “저축의 결정요인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한 저축행동”, 『지역개발연구』, 36(1): 195~221.
- 이태진 · 신영석 · 김미곤 · 노대명, 2005,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 보건복지부.
- 정외택, 2007,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설: 요보호아  
동이 후원금 적립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 불입”, 『복  
지타임즈』, 3월 8일자([http://www.bokjitime.com/  
paper/news/view.php?newsno=4136](http://www.bokjitime.com/paper/news/view.php?newsno=4136))
- 조영무, 2004, “저축률의 빈부격차 확대”, 『LG주간경제』,  
7월 21일자: 31~34.
- 차경욱, 2003, “미국 편모가계의 저축결정 요인에 관한 연  
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6):91~104.
- 한국노동연구원, 2006,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사자  
료 User's Guide』.
- Avery, R. B. and Kennickell, A. B., 1991, “Household  
saving in the U.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7(4): 409~432.
- Dusenberry, J., 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Harvard University Press.
- Espenshade, T., 1984, *Investing in children*,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Friedman, M., 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instein-Weiss, M., Wagner, K., and Sewamala, F. M.,  
2006, “Saving and asset accumulation among low-  
income families with children in IDA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2): 193-211.
- Hefferan, C., 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11(1): 47~55.
- Keynes, J. M., 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Harcourt.
- Modigliani, F. and A. Ando, 1960, “The permanent  
income and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behavior: comparison and tests, in I. Friend and R.  
Jones (eds.), *Consumption and Savi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Vol.2: 129~174.
- OECD, 2008, *OECD Economic Outlook No. 82*,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Schreiner, M., Clancy, M., Sherraden, M., 2002, *Saving  
Performance in the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Final Report)*,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Sherraden, M., 1988, “Rethinking social welfare: Toward  
assets”, *Social Policy*, 18(3): 37~43.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e.
- Sherraden, M., Schreiner, M., and Beverly, S., 2003,  
“Income, Institutions, and Saving Performance i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 17, No. 1, February,  
95~112.



- Xiao, J., 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Vol. 7: 21~30.
- Ziliak, J. P., 1999, *Income Transfers and Assets of the Poor*,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1202~1299.
- <http://gwbweb.wustl.edu/csd/about/gap.htm>
- <http://www.childtrustfund.gov.uk/>
- [http://www.hm-treasury.gov.uk/documents/financial\\_services/savings/topics\\_savings\\_gateway.cfm](http://www.hm-treasury.gov.uk/documents/financial_services/savings/topics_savings_gateway.cfm)
- [http://www.oecd.org/document/61/0,3343,en\\_2825\\_32066506\\_2483901\\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61/0,3343,en_2825_32066506_2483901_1_1_1_1,00.html)
- <http://www.sedi.org/html/programs/learnSave.asp>

원 고 접 수 일 : 2008년 2월 14일

1차심사완료일 : 2008년 4월 21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8년 6월 5일